

기록관리 관점에서 본 공공분야페이퍼리스 동향 분석과 시사점 연구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Paperless Trends in the Public Sector from the Record Management Perspective

김태영(Tae-Young Kim) | 국민연금공단 IT전문위원 | fnty127@hanmail.net

목 차

- 서론
- 페이퍼리스 동향 분석
- 기록관리 관점에서 본 시사점
-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기록관리 관점에서페이퍼리스 사회로의 변화 흐름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페이퍼리스 환경은 기업, 기관 및 개인에게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록관리 분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조명한다. 이에 공공분야에서의페이퍼리스 동향과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페이퍼리스 환경이 기록관리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키워드 : 페이퍼리스, 디지털 전환, 공공기록물, 전자기록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 towards paperless society from the records management perspective and the implications arising from it. In this digital era,, the paperless environment not only offers efficient working conditions for businesse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but also plays a crucial rol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ource conservation. However, these trend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cords management. This research primarily focuses on these impacts. In this context, we explored the effects and implications of paperless environment in the records management field by analyzing the paperless trends in public institutions.

* Keywords : Paperless, Digital Transformation, Public records, Electronic records

• 논문접수: 2023년 9월 18일 •최초심사일: 2023년 9월 28일 •심사완료일: 2023년 10월 11일

1. 서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은 기업, 정부, 개인에게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페이퍼리스란 종이문서 기반의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 전자문서로의 전환을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사회가 활성화되면서 전자문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강화되면서 종이문서의 전자화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2021). 현재는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 사회 전반에서 종이문서 생산과 유통이 줄어들고, 전자문서 기반의 새로운 제도와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는 시점이다(정진명, 2022).

그러나 이러한 페이퍼리스는 단순히 환경 변화나 종이문서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 관리 분야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한다.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모두가 기록물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록관리와 페이퍼리스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패러다임 중 하나인 페이퍼리스 환경이 공공분야의 기록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 동향을 토대로 기록관리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의 페이퍼리스와 디지털 전환 정책 동향을 기록관리 관점에서 본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먼저 양영식 외(2019)는 국가기록원에서 추진한 블록체인 기반 공공기록물 정보관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법적 요건을 분석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공기록의 전체 관리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설문원(2020)은 디지털정보 보존에 관한 추진계획 및 전자정부법 개정에 근거하여 기록관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과 호주의 공공기록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공공기록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우지원(2020)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기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데이터 관련 법률 및 정책이나 영국, 호주의 디지털 연속성 개념, 그리고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한 정책 분석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록관리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정상명(2023)은 현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정책 추진 동향에 주목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다양한 법령이 급속히 개정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의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현재 공공분야의 페이퍼리스 동향과 이에 따른 공공기록물 분야의 변화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페이퍼리스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정책 동향을 함께 고려하여 미래의 기록관리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페이퍼리스 동향 분석

본 연구는 공공분야의 페이퍼리스 동향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정부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2017~2022)는 페이퍼리스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디지털 전환의 초석을 놓았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2022~현재)는 이를 본격화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선보였다. 두 정부 모두 페이퍼리스와 디지털 전환을 중요 정책 아젠다로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정부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페이퍼리스 촉진을 위한 노력

1)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9년부터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정부 행정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자문서 도입을 확산 시켰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디지털 전환 신서비스 발굴을 통한 전자문서 확산으로(최호, 2022b;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 2019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서도 디지털 고지·수납을 우선 추진과제로 제안함에 따라 관련 과제들이 활성화되었다.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 선정된 페이퍼리스 촉진 사업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2019~20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현황

사업연도	구분	수행기관	과제 내용
2019년	모바일 전자고지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
		국세청	·국세 안내문의 모바일 발송 서비스 구축
		대한산업 보건협회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결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청	·스마트 고지 기반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서비스 구축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부평구 통합 전자고지업무 포털 시스템 구축(
		충북 진천군청	·진천 스마트 고지 · 안내 시스템 구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자고지 · 안내 시스템 구축
	전자문서 확산	(주)아톤(컨소시엄)	·단일플랫폼을 통한 전자영수증 서비스 실증
		유비케어	·QR코드 기반의 전자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적용
		케어랩스(컨소시엄)	·모바일앱 기반의 전자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 개발
2020년	모바일 전자고지	경기도청	·모바일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시스템 구축
		경상남도	·경상남도 통합전자고지 플랫폼 구축
		제주시청	·제주도 모바일 고지·안내 토탈시스템 구축
		한국환경공단	·5등급 차주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고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문서 확산	(주)포덱스(컨소시엄)	·다수 사업자 간 호환가능한 전자영수증 서비스
2021년	모바일 전자고지	국방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통합모바일 송달 체계 구축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전자문서 고지시스템 개발
		대한적십자사	·대국민 모금 캠페인 확산을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및 납부 시스템 구축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시스템 구축
		충청북도청	·충청북도 통합 전자고지 서비스 플랫폼 구축
		특허청	·지식재산(특허·실용·디자인·상표) 분야 모바일 전자고지·안내 도입
		한국전기 안전공사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모바일 전자안내 발송시스템 구축

사업연도	구분	수행기관	과제 내용
2022년	모바일 전자고지	전라북도청	·전라북도 통합 전자고지 플랫폼 구축 및 시험운영
	전자문서 확산	온라인팜(컨소시엄)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구축
		조달청	·계약 실적증명서 온라인 연계·전송서비스 확대
		한국무역정보통신(컨소시엄)	·디지털 시험성적서 발급 및 유통체계 구축
2023년	모바일 전자고지	제주도청	·음성안내 모바일 고지 체계 구축
	전자문서 확산	(주)올링크	·NFC 기반 전자영수증 신뢰서비스 발급체계 구축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디지털 거래명세서 발급 및 유통체계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문서 유통 및 원본 증명플랫폼 구축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2023;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은 크게 모바일 전자고지와 전자문서 확산 영역으로 구분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고지서와 청구서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개인 스마트폰으로 받는 서비스로, 개인식별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이하 CI)로 일괄 변환함으로써 암호화하여 활용해야 한다.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주민등록번호의 CI 생성과 제공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은 ICT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임시허가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들이 제공되었다(최호, 2022a). 그러다 2023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전자고지 서비스에 필요한 연계정보처리가 가능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이 예고되면서 정보통신망법이 강화되어 앞으로는 정식으로 주민등록번호의 CI 일괄변환이 가능해졌다. 2019년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기관이 253개였지만 2022년에 492개까지 증가하여(전자문서 통합지원센터, 2022), 모바일 전자고지 체계로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전자문서 확산 측면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23년 종이문서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기 위해 전자문서 유통 및 원본 증명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우체국의 내용증명과 같은 수준의 전자문서 증명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에 우편을 통해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했던 작업을 전자문서 형태로 구현하게 되는데 이때, 전자문서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연계하여 문

서 유통사실을 증명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원본 증명서를 보관하여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보장한다(서정화, 2023; 한국토지주택공사, 2023). 여기서 언급되는 ‘공인전자문서증계자’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증계하는 자로서 공인전자문서증계자를 통해 송·수신되는 전자문서는 무결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고,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된다. 현재 2023년 8월 기준 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 우리은행 등 17개 기관이 공인전자문서증계자로서 인증받았다(전자문서 통합지원센터, 2023b). ‘공인전자문서센터’ 또한 전자문서법에 의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기간 동안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기관으로 2023년 8월 기준 한국무역정보통신, LG CNS, 하나금융티아이, 더존비즈온, KT, KB신용정보 6곳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인증받았다(전자문서 통합지원센터, 2023a).

2) 전자증명서와 마이데이터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는 2019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3차에 걸쳐 구축하면서 페이퍼리스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또한 2019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언급된 사항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과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을 통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다. 전자증명서는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특정한 사실이나 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발급하는 민원문서이며, 모바일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보관된다. 현재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365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되고 있다(정부24, 2023). 따라서 모바일만 있으면 간단한 개인인증으로 손쉽게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바로 기관에 안전하게 제출 가능함에 따라 공공 업무처리 전반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그 결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건수가 2022년에만 8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디지털정부 서비스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김지선, 2023).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자증명서에 더하여 2020년부터 3년간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나의 행정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한 번에 간편하게 모아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본인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실시간 연계되면서 기존에 서류를 확인하여 처리하던 업무 방식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유통체계가 활성화되면서 2023년 6월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군인연금수급권자확인서,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159건의 마이데이터가 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를 활용한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가 개시되어 생활·금융·창업·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101종이 <표

2>와 같이 제공되고 있다.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되어 개인이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통해야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본인이 필요한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면 API를 통해 분산된 다양한 개별 정보가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세트르 제공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정부24, 2023).



* 출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3

<그림 1> 마이데이터 제공 예시

<표 2>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범서비스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생활·병역 (44)	강원도	강원도 도민증명
	경기도	도민 카드 신청
	경기 수원시	시민농장 온라인 신청
	경기 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남 김해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신청, 개명신고, 기초생활보장 신청, 기초연금 신청,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청,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디딤씨앗통장 신청, 문화이용권(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 양육수당 신청, 어디서나 민원,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장애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발급 (재발급) 신청,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청소년증 발급 신청, 출생신고
	경상북도	경상북도 모바일 도민증
	경상남도	교복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대전광역시	누리온(지능형 민원처리서비스)
	서울 성동구	문화이용권(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신청, 복지 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발급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출생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티앱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어디서나 민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신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출생신고,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 실거주 인증, 전기요금 복지할인
행정안전부	국가보조금24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금융·세금·법률 (17)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 인상신고 서비스, 연금일부정지 조정·해지 신청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 금융상품 지원대상자 확인 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자금신청 서비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서비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서민지원 예금상품 서비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청약·공제금 신청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수신, 금융여신, 신용카드 신청서비스, 신용평가 가점부여
	행정안전부	지방세보조금
	취업·직장 (13)	강원도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일자리정책 거주정보 확인, 경기 일자리정책 중위소득 확인, 경기도 일자리정책 현거주지 확인,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 사업 참여조건 확인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교육부		교육부 교원임용시험지원, 교육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보험급여, 생활안정 자금용자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온라인 신청,
한국고용정보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서비스
결혼·육아·교육 (10)	경남 김해시	아동급식 신청, 이혼(친권자 지정)신고,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경상남도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
	서울 성동구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 신청
	서울특별시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신청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서비스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창업·경영 (6)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경남 김해시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경상북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 소상공인 활력지원
	전라북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 수당 신청,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어업인수당
	충청북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신청
주택·부동산 (4)	부산광역시	청년 전월세증개보수지원 참여자격 확인,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한국토지주택공사	MyMy 서비스(임대주택청약)
건강·의료·사망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경남 김해시	사망신고
	서울 성동구	
	보건복지부	나의 건강기록 서비스
환경재난(2)	소방청	119 안심콜 서비스
	한국공항공사	소음피해지역주민 냉방전기료 지원
여가·문화·출입국 (2)	외교부	여권발급서비스
	경남 김해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서울 성동구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정부24, 2023

2.2.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등장

2022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정과제로 부상하여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만드는데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주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22년 7월에는 디지털플랫폼

품정부 실현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대통령플랫폼정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로드맵을 위한 주요 선도와제를 선정하여 올해 4월 드디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페이퍼리스 관련해서는 ‘디지털을 기본으로 한 행정체계의 혁신(Digital by Design)’이 주목할 만하며, 앞으로 이에 따른 규제 변화가 크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되던 페이퍼리스는 규제 개혁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전반이 디지털로 전환되어야만 현실화될 수 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반로의 행정체계 전환 추진을 언급하며, 행정제도 전면 재설계, 종이 없는 행정, AI가 읽는 문서, 자동화 행정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표 3>과 같이 제안하였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2; 2023).

<표 3> 디지털 기반의 행정체계 혁신 관련 세부 추진과제

주요 영역		세부 과제
①	행정제도·절차에 디지털 기본원칙 적용	디지털 기본, 보완적 아날로그 전환 근거 마련
②	행정제도 전면 재설계	아날로그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
		인감증명제도 디지털방식 대체 수단 제공
		실물 신분증 모바일 발급
		Digital by Design 지원사업 확대
③	종이 없는 행정	원본보관을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연구현장 등 감사 시 증명자료 전자적 형태 제출
		전자고지를 기본으로 법령 개정
		전자고지 확대
④	AI가 읽는 문서	시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 및 소관기록물 디지털화
		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문화 혁신
⑤	자동화 행정	자동화 도입

* 출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행정체계는 온라인·데이터·자동화를 기본으로 하는 디지털 기반 행정체계로 변화될 예정이며, 이러한 토대 마련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

정이 현재 추진 중이다. 특히, 종이 없는 행정을 위해 전자문서가 모든 법령에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에 대한 그간의 여러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크게 주목할 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전자문서법을 개정하여 종이문서 원본을 갈음하여 전자문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는 332개의 개별법령이 서면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문서로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이들 법령이 모두 일괄 정비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전자문서가 종이 원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영역에서 종이문서가 완전히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정상명, 2023), 공공기록물 관리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이 외에도 민원인에게 문서로 고지하던 환경에서 전자고지를 기본으로 하도록 개별법령을 개정하고, 사람과 인공지능이 모두 읽을 수 있는 문서로 생산·보관·공개되도록 모든 공문서 형식이 odt, ods, hwp, docx, xlsx, pptx 등의 개방형 포맷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여 기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2023년 6월 27일부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개방형 포맷과 관련하여 제3조(정의) 제2호의2와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제2항이 신설되었다. 규정 제3조 제2호의2에서는 개방형 문서 형식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및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형 포맷을 정의하고 있다. 제5조 제2항에서는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문서 요지 및 키워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형 문서를 작성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형식으로 문서를 제공하면서도 이를 다양한 장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문서의 데이터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온나라시스템 첨부파일 포맷을 개방형 포맷으로 변경하였다(최호, 2022c).

3. 기록관리 관점에서 본 시사점

페이퍼리스와 디지털 전환을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부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페이퍼리스 관련 정책들을 토대로 기록관리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1. 전자문서법 개정

먼저 첫째로 기록물의 보존장소 및 방법의 변화 흐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15년에 공공기관의 문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건의사항으로 공공기록물을 민간기록물관리시설에 보존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19대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다(행정자치부, 2015). 이후 19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공공기록물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하였으나, 공공기관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대표되는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현재로서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를 근거로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까지 관할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 보존되어야 하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해야 한다.

다만, 2020년 6월에 전자문서법이 개정되면서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에 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단서 조항이 있지만 원본 문서 폐기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종이 원본 폐기가 불가능한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9조(보존방법)에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공공기록물법 규정 적용이 우선된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하는 기록물의 범위가 넓으므로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는 원본 문서를 전자화하여 폐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전자문서 형태로 문서를 생산함으로써 종이문서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디지털정부플랫폼 실현계획에 의해 전자문서법의 지위가 더욱 강화될 예정으로, 종이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만으로도 갈음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면서 관련 개별법령들이 함께 일괄 정비된다. 결과적으로 종이문서 원본이 전자문서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전망으로 보인다(정상명, 2023).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향후 전자문서법이 공공기록물법보다 우선 적용될 것이며, 앞으로 공공기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종이문서 원본을 전자화하고 원본을 폐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최근에 일부 범위에 한정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페이퍼리스 축진의 일환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원본증명서를 발급·보관하여 전자문서의 원본성과 불변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2023).

이러한 흐름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영역이 민간에서 공공분야로 확대되면서 공공기록물의 보존장소와 방법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면 문서 건당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짧은 종이문서 등에는 해당 제도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기록관에 기록물을 보존하는 현 체제에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기존에 공공기록물을 외부 민간기록물관리시설에 보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미 있었고, 공공기록물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현재의 기록물관리 체제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자화 기록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원본 종이문서를 폐기하도록 해달라는 질의와 요구가 계속되었으나(국가기록원, 2021), 그동안 국가기록원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처가 없었다. 그리고 결국 2023년 4월 디지털정부플랫폼 실현계획에 의해 전자문서법 개정이 먼저 예고되면서 공공기록물법이 기록물

에 대한 주도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위와 관련된 공공기록물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3.2.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두 번째로 공공기록물 영역에서 행정정보데이터세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행정정보데이터세트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앞서 한차례 설명한 전자증명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기관의 업무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활용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에 의해 행정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곳에 행정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22b;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이렇듯 디지털 전환과 페이퍼리스의 가속화로 현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행정정보데이터의 중요성과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활용되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에 대한 현행 기록관리체계는 어떠한가. 너무 문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미 현행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가 문서와 데이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정상명, 2023). 과연 기관의 주요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를 별도로 이관하여 보존할지 의문이다. 특히, 전자수단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의 확대로 시스템들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데이터가 한 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시스템마다 단위기능별로 보존기간이 같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데이터는 생산과 활용이 순환되는 구조이지만, 이를 문서처럼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이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마이데이터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2023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신설되었고,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3)에 의하면 추진단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마이데이터 기본 준칙과 체계를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법제도를 수립하고, 선도서비스 발굴·지원을 거쳐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여 2025년도부터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업·기관에 갇혀있던 데이터를 국민의 요구에 따라 활발하게 연계·융합하여 데이터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 간 활발한 상호이동성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특히,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

략에 의해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이 예고됨에 따라 법 개정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3.3. 개방형 포맷 도입

세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이제 모든 공문서는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는 개방형 포맷으로 생산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개방형 포맷을 통해 문서 파일을 직접 열지 않아도 데이터 확인·추출이 가능하고, 이를 다양한 시스템에서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0년간 공공부문에서 폐쇄형 문서 포맷을 사용함에 따라 데이터 추출이 어려워 문서 내부의 방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온나라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공분야 전제로 개방형 포맷 문서 사용을 확대하여 전자문서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최호, 2023c).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2022c)는 개방형 포맷 도입이 정부에서 생산한 행정문서의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이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공문서를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개방형 포맷의 도입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전자기록물의 활용과 공유를 더욱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록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이 기록을 생산·수집·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의 검색서비스는 2013년 개편 이후 기본적인 유지보수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로 질의 오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고, 원천 데이터의 품질 문제로 인해 검색 결과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나정호 외, 2022). 그러나 앞으로 문서 요지 및 키워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방형 포맷 문서가 생산되면 기록 검색서비스의 성능 향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록 활용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방형 포맷의 도입은 기록관리 분야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공공기록물법에서 바라보는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그리고 이중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는 ‘전자기록물’로 분류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안전부가 행정 및 공공기관의 전자문서를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기록물을 공공데이터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데이터와 전자기록물의 범주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2023년 6월 국회에 제출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생산부터 이관, 보존에 이르는 생애주기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법이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

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기록물관리’로 규정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물론이고 전자문서도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공공기록물법보다 공공데이터법을 우선 적용하여 전자기록물이 관리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정상명, 2023).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계속 공문서를 데이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공공데이터법의 데이터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와 공공기록물법상의 기록물관리는 명백히 중복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페이퍼리스와 디지털 혁신 추세에 맞춰 제·개정될 전자문서법, 공공데이터법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공공기록물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령들 사이의 중복되는 내용과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들 법률 간 관계와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기록관리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줄이고 공공기록물법의 위치를 공고하게 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기록관리 체계와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 또한 시급하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공기록물법의 실질적 효용성이 약화될 위험성이 크다.

4. 결론

본 연구는 공공분야의 페이퍼리스 동향과 정부 정책이 공공기록물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공공분야에서 페이퍼리스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전자증명서 및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페이퍼리스 관련 정부 정책들이 기록관리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의해 전자문서법의 개정이 예고되면서 종이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갈음하여 보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종이문서가 전자문서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공공기록물에 대한 주도권을 전자문서법에 빼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전자증명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활용한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인지하여 데이터 간 활발한 상호의동성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앞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에 의해 제·개정되는 마이데이터 관련 법령 추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문서가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는 개방형 포맷으로 생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자문서를 데이터로 바라보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데이터법의 데이터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와 공공기록물법상의 전자기록물 관리 범주가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기록관리 분야에서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핵심 가치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2021). 공공기록물법령 질의답변 사례 -전자기록물 관련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29, 1-2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과제 선정. 검색일자: 2023. 8. 10. <https://www.msit.go.kr/bbs/list.do?sCode=user&mPid=238&mId=1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 감소에 나서. 검색일자: 2023. 8. 10. <https://www.msit.go.kr/bbs/list.do?sCode=user&mPid=238&mId=113>
- 김지선 (2023).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281% 증가한 809만건...디지털정부 실적 대폭 증가. 검색일자: 2023. 8. 28. <https://www.etnews.com/20230822000155>
- 김지혜, 김수정 (2022). 국내외 공공데이터 포털 정보서비스 현황 비교 분석.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5(1), 67-83.
- 나정호, 소현기, 염경록, 이정옥, 오효정 (2022). 국가기록포털 검색서비스 품질 점검을 위한 평가셋 구축 및 현황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4), 25-43.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2).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서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a).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한 법제정비 본격 추진. 검색일자: 2023. 9. 8. <https://www.dpg.go.kr/DPG/contents/DPG02020000.do?schM=view&id=20230904144433694381&schBcid=press>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b).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서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서정화 (2023). LH, 블록체인 접목 증명 플랫폼 구축한다. 검색일자: 2023. 8. 11. <https://www.etnews.com/20230804000167>
- 설문원 (2020).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공기록정책: 기록자산으로서 정보의 관리. 기록학연구, 63, 5-36.
- 양영식, 송인방, 박상혁 (2019). 페이퍼리스 전자정부를 위한 공공기록물 정보관리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19(4), 77-102.
- 우지원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록관리 패러다임 전환방안 연구.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1, 45-75.
- 우지원 (2021). 디지털 시대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화 기록물 원본 인정방안 연구.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3, 65-93.
- 이소연 (2016).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법 개정(안): 쟁점과 과제. 기록학연구, 47, 197-225.
- 전자문서 통합지원센터 (2022).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 통계. 검색일자: 2023. 8. 10. <https://xn-z92bu1it5fina.kr/front/enotice/useServiceStatus.do>
- 전자문서 통합지원센터 (2023a). 공인전자문서 센터 제도. 검색일자: 2023. 8. 30. <https://xn-z92bu1it5fina.kr/front/eIntro/appointCenterPolicy.do>

-
- 전자문서 통합지원센터 (2023b).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 검색일자: 2023. 8. 30. <https://xn-z92buLit5fina.kr/front/eIntro/appointCompanyPolicy.do>
- 정부24 (2023). 공공 마이데이터 안내. 검색일자: 2023. 8. 29. <https://www.gov.kr/portal/mydata/myDataIntroduction>
- 정상명 (2022). 공공기록물법의 전부 개정 필요에 대한 논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4, 7-54.
- 정상명 (2023). 국정과제로서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대응 방향: 공공기록물 관리에 미치게 될 영향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7, 37-74.
- 정진명 (2022). 지능정보사회에서 전자문서법의 과제. 재산법연구, 38(4), 199-232.
- 최호 (2022a).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 500여개 기관 발송...연간 400억원·CO2 5000톤 절감. 검색일자: 2023. 8. 15. <https://www.etnews.com/20221205000160>
- 최호 (2022b).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 페이퍼리스 사업 본격 확대. 검색일자: 2023. 8. 15. <https://www.etnews.com/20221205000200>
- 최호 (2022c). 행안부, 개방형 문서 포맷 전환 착수...빅데이터 활용 가속. 검색일자: 2023. 8. 15. <https://www.etnews.com/20220525000169>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3).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검색일자: 2023. 8. 12. https://www.kdata.or.kr/mydata/www/board/guide_01/boardView.do?bbsIdx=21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KISA, 페이퍼리스(Paperless) 2.0 컨퍼런스 2018 개최. 검색일자: 2023. 8. 21. https://www.kisa.or.kr/402/form?postSeq=1682&lang_type=KO&page=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전자문서·전자거래 글로벌 동향 조사.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 2022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추진계획.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2023). 과업내용서(종이문서 내용증명 효력 대체를 위한 전자문서 유통 및 원본 증명 플랫폼 구축).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 행정안전부 (2019).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세종: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22a).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지침서. 세종: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22b).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세종: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22c). 중앙부처, 행정문서 생산 시 개방형 서식 등 의무화 추진. 검색일자: 2023. 8. 10. https://www.mois.go.kr/fi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4424
- 행정자치부 (20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세종: 행정자치부.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 E-Document Integrated Support Center (2022).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tatistics. Retrieved August 10, 2023 from <https://xn-z92bulit5fina.kr/front/enotice/useServiceStatus.do>
- E-Document Integrated Support Center (2023a).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System. Retrieved August 30, 2023 from <https://xn-z92bulit5fina.kr/front/eIntro/appointCenterPolicy.do>
- E-Document Integrated Support Center (2023b).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Intermediary System. Retrieved August 30, 2023 from <https://xn-z92bulit5fina.kr/front/eIntro/appointCompanyPolicy.do>
- Government 24 (2023). Public MyData Guide. Retrieved August 29, 2023 from <https://www.gov.kr/portal/mydata/myDataIntroduction>
- Ho Choi (2022a). [Expansion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s] Annual savings of 40 billion won and 5,000 tons of CO2 with dispatches from over 500 institutions. Retrieved August 15, 2023 from <https://www.etnews.com/20221205000160>
- Ho Choi (2022b). [Expansion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s] Actively expanding the paperless initiative. Retrieved August 15, 2023 from <https://www.etnews.com/20221205000200>
- Ho Choi (2022c).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begins the transition to open document format, accelerating the utilization of big data. Retrieved August 15, 2023 from <https://www.etnews.com/20220525000169>
- Jeewon Woo (2020). A Study on the Change of Record Management Paradig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stitute of the Information & Archival Science, 11, 45-75.
- Jeewon Woo (2021). A Study on Ways to Recognize the Originals of Electronic Records for Records Management in the Digital Era. Institute of the Information & Archival Science, 13, 65-93.
- Jeong Ho Na, Hyeon-Gi So, Gyung Rok Yeom, Jung-Ok Lee and Hyo-Jung Oh (2022). Test Set Construction for Quality Evaluation of NAK Portal's Search Service and the Status Analysi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2(4), 25-43.
- Jeong-hwa Seo (2023). LH builds a verification platform using blockchain. Retrieved August 11, 2023 from <https://www.etnews.com/20230804000167>
- Ji-seon Kim (2023). The issuance of mobile electronic certificates increases by 281% to 8.09 million, significantly boosting the performance of the digital government. Retrieved August 28, 2023 from <https://www.etnews.com/20230822000155>
- Jin-Myung Chung (2022). The task of the Electronic Document Act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Journal of Property Law*, 38(4), 199-232.
-

-
- Kim, Ji-Hye & Kim, Soojung (2022).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Open Data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5(1), 67-83.
- Korea Data Agency (2023). Public Mydata Business. Retrieved August 12, 2023 from https://www.kdata.or.kr/mydata/www/board/guide_01/boardView.do?bbsIdx=21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8). KISA Hosts ‘Paperless 2.0 Conference 2018. Retrieved August 21, 2023 from https://www.kisa.or.kr/402/form?postSeq=1682&lang_type=KO&page=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21). *Global Trends Research o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Naju: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22). *2022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ilot Project to Promote Paperless Initiatives*. Naju: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2023). *Task Description(Building an electronic document distribution and original verification platform to substitute the evidential effect of paper document)*. Jinju: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1). *Q&A Cases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 Focused on Electronic Records*. *Records Management Issue Paper*, 29, 1-23.
- Ministry of the Interior (2015). *Legislative Notice for Partial Amendment to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Sejong: Ministry of the Interior.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9). *Digital Government Innovation Implementation Plan*. Sejo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2a). *Public MyData Service Execution Guidelines*. Sejo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2b). *Public MyData Service Guide*. Sejo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2c).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re Pushing for the Mandatory Adoption of Open Formats and the Like When Producing Administrative Documents*. Retrieved August 10, 2023 from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4424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9). *Selection of the ‘Nationwide Notification and Information Letter Digitalization Pilot Project’ Task*. Retrieved August 10, 2023 from <https://www.msit.go.kr/bbs/list.do?sCode=user&mPid=238&mId=113>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3).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akes steps to reduce paper document usage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Retrieved August 10, 2023 from <https://www.msit.go.kr/bbs/list.do?sCode=user&mPid=238&mId=113>
-

-
- Moon-won Seol (2020). Managing Information as Records Asset : Public Records Policie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3, 5-36.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2023). *National Mydata Innovation Strategy*. Sejo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2022). *Results of the 2nd Meeting*. Seoul: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2023a). Actively pursuing legal reforms to eliminate data silos. Retrieved September 8, 2023 from <https://www.dpg.go.kr/DPG/contents/DPG02020000.do?schM=view&id=20230904144433694381&schBcid=press>
-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2023b).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mplementation Plan*. Seoul: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 Sang Myung Jeong (2022). Discussion on the need for a complete revision of the Public Records Act: Focusing on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nstitute of the Information & Archival Science*, 14, 7-54.
- Sang Myung Jeong (2023).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romotion and Response Direction as a National Task : Focusing on the Impact that Will Have on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77, 37-74.
- Soyeon Lee (2016) Revising the Archives Law to Boost Commercial Records Facilities Industry : Issues & Task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7, 197-225.
- Young Sik Yang, In Bang Song and Sanghyeok Park (2019). Legal review of public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for paperless e-government. *Law Review*, 19(4), 77-102.